

주간

정책 동향 5호 (11/27~12/3) 2017년 12월 4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청년	대학생 방학생활 미리보기	2
평화재단	통일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2
세종연구소	외교	유엔안보리와 강대국정치: 구조, 절차, 개혁논의	3
KDI	재정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4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6
경실련	부동산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7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청와대	안보	문재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지시사항	8
청와대	안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NSC 전체회의 결과	8
주한미국대사관	안보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톰 라소프 장관의 성명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전문	9
조선중앙통신	안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	10
교육부	교육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10
※ 참조자료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료	12

※ '싱크탱크 미래'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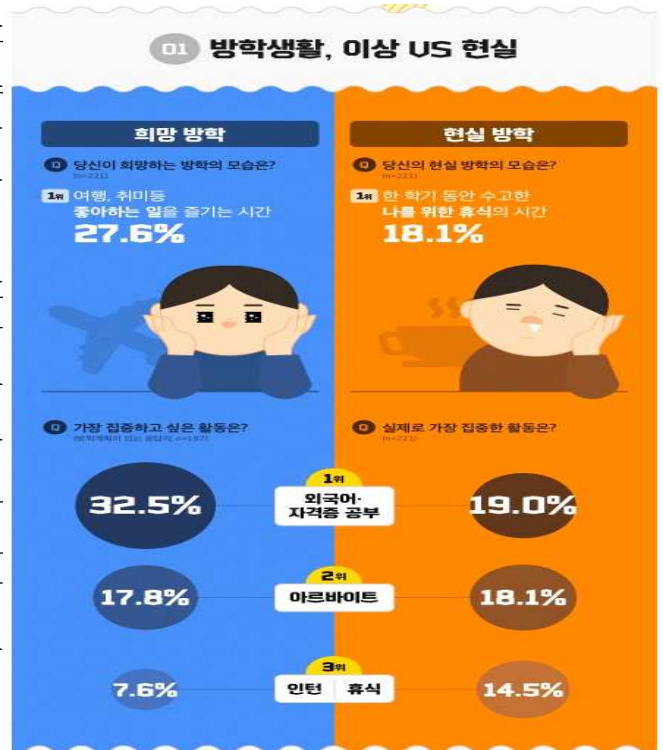
■ 대학생 방학생활 미리보기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7.11.30)

<요약>

1) 대학생이 꿈꾸는 방학과 현실 방학간의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국 대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방학 전후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방학생활을 계획한 대학생과 계획하지 않은 대학생이 방학을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2) 희망하는 방학의 모습 1위는 여행, 취미 등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시간 27.6%순임. 방학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활동 1위는 32.5%(외국어 자격증 공부), 2위 17.8%(아르바이트) 3위 7.6%(인턴/ 휴식)임. 그러나 방학동안 실제로 가장 집중한 1위 19.0%(외국어/ 자격증 공부), 2위 18.1%(아르바이트), 3위 14.5% (인턴/휴식)로 나타남. 지난 방학 만족도에서도 45.2%가 만족, 28.1%가 불만족으로 응답함.

<원문 읽기> <https://goo.gl/c5htFx>



[시사점]

1) 청년실업시대를 반영하는 응답결과겠지만, 대학생들은 방학을 외국어와 자격증 공부와 아르바이트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평화재단, 2017.11.30.)

<요약>

1) 북한은 정부성명을 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호를 발사했으며 고도 4,475km, 거리 9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다...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합참에서는 즉각적으로 “탄종이 화성14계열 장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도 가장 진전된 ICBM급 기종으로 평가했다.

2)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은 문제없다고 과시를 한다. 실제로 시장 쌀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을 보면 국제시세와 환율변동에 따른 약간의 가격 변화는 있지만,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가격급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식량 생산이 안정되어 있고, 시장에서 물자 수급을 조절할 정도로 시장기능도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인 듯하다.

3) 북한 당국의 오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

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 이번 발사에서도 재확인했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을 진짜 무서워한다는 착각에 빠진 듯하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자제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 정도와 주변국의 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 정도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정을 해치는 수준이 된다면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4)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착각에 빠져 있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수록 북한의 고통은 심해지고 결국 굴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한 듯하다...미국만이 아니라 북한 역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치킨게임이 심화되면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양쪽 모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5) 이제 북한에게 남은 카드는 실제로 핵탄두를 싣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거리 사격하는 것밖에 없다. 만일 실패할 경우 북한은 양치기 소년이 된다. 성공한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보다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연명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로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 남은 하나의 카드를 던지면서 미국과의 담판에서 승리할 확률 또한 대단히 낮다.

6)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조건 없는 대화밖에 없다. 미국이나 북한만이 아니라 역내의 관련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다...지금,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할 시간이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까지 모두 포괄해서 대화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누구도 나서지 않는 막다른 게임에서 한국 정부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해묵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문 읽기> <https://goo.gl/tSkDWP>

시사점

- 1)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함.
- 2)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함.

유엔안보리와 강대국정치: 구조, 절차, 개혁논의 (정은숙, 세종연구소, 2017.12.1.)

<요약>

1) 유엔은 냉전과 냉전이후의 국제질서를 가로지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가장 정통성 있는 기제로 간주되어 왔다...유엔헌장 25조에 따라 안보리 결정은 회원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안보리는 유엔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의거, 분쟁당사국들로 하여금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고 조정의 방식 혹은 해결의 조건을 제시한다...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 혹은 복원을 위해 부득이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의거, 비군사적 제재 (41조)를 가하거나 나아가 무력사용

(42조)을 승인할 수 있다.

2)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하 P5) 중 한 나라라도 자국 이익을 계산하고 특정초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정은 불가능하다...미국이 아사드 대통령을 화학무기로 자국민을 살해하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안보리제재를 시도하는 데 반해, 러시아는 아사드정권 존립을 목표로 한다. 2017년 현재 러시아와 서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또 다른 현안은...역시 안보리가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명시적 묵시적 반군 지원하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주로 돈바스)에서 발발한 내전으로 지난 3년간 10,225명이 목숨을 잃었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다.

3) P5가 초안을 안보리 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할 때는 이미 상당한 “상호양보”들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대체로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이 초안내용을 수정할 여지는 크지 않다. 산술적으로 만일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7개국이 연대한다면 P5가 합의한다 해도 초안 통과가 어렵다 (반대 7: 찬성 8). 통과를 위해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냉전종식 후 유엔회원국들은 안보리 관행과 절차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 주로 “안보리 구조”(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구성과 권한 등) 개혁이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G4(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서로 돕기 위해 2005년 결성됐다...안보리 구성변화는 유엔헌장 수정을 수반해야만 하는데, 헌장의 수정은 또다른 지난한 노정이다. 유엔헌장 108조에 따르면 총회 구성국의 2/3가 찬성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 2/3가 각각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현재의 P5 냉전기는 동서(東西)이념에 따른 진영정치에 종속되어 안보리 개혁을 논할 여건이 아니었다.

5) 안보리의 정당성 제고를 목표로 한 개혁과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유엔체계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다. 안보리 개혁 워킹그룹 창설 25주년이 되는 내년 일본 등 G4 국가들이 개혁논의를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G98ePu>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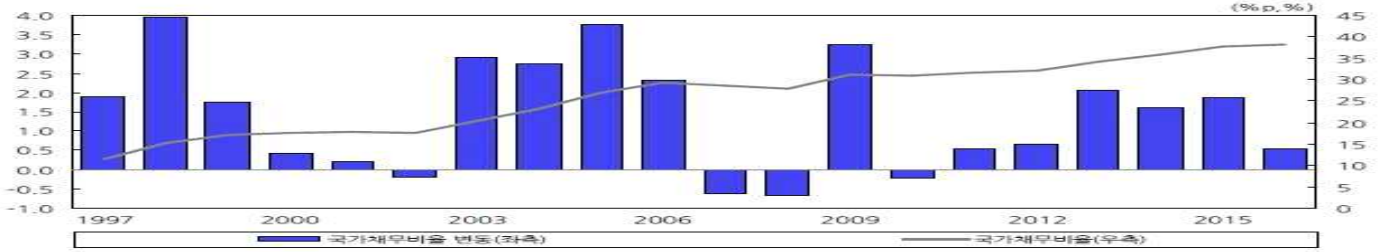
1)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와 그간의 안보리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혁과제의 현황에 개괄할 수 있는 참조자료.

■ [KDI 현안분석]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이태석 외, KDI, 2017.11.27.)

<요약>

- 1)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세수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 재정여력(fiscal space)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the debt limit)과 현재 국가부채와의 격차를 의미...IMF 등은 한국경제의 재정여력을 GDP의 200~250% 수준으로 추계..IMF(2010)는 한국의 재정여력을 GDP의 203%, Moody's(2014)는 GDP의 241%로 추계하여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변동분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각 연도.

3) 기초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 적자폭이 축소되어 부진했던 국가부채 관리노력이 미약하게나마 개선되는 모습. 2012년 이후 발생한 재정적자 확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복지 지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데 기인

4) 따라서 향후 재정정책은 최근의 부채관리 노력 개선 추이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한편, 최근과 같은 세수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세수여건 호조 시기에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원문 읽기> <https://goo.gl/B3Y4QF>

시사점

1) IMF 등의 우리 국가의 재정여력 평가에 따르면,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국가부채를 감축함으로써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고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 지적 참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장우석-이진하, 현대경제연구원, 2017.11.27.)

<요약>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①금융 거래의 탈중앙화...②자산 운용의 인공지능화...③거래방식의 비대면(非對面)화...④규제 및 진입장벽 약화

2) 국내 금융산업의 준비 수준, ①(기술) 국내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으로 평가...②(투자)금융산업의 R&D 투자는 타 산업 및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③(인력)금융산업은 인간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특히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④(법·제도)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산업 육성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핵심 요소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둘째, 금융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셋째, 인간 노동이 컴퓨터로 대체되는 금융 인력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원문 읽기> <https://goo.gl/35hHx9>

시사점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조망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준비 수준, 산업 육성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조속한 대책 필요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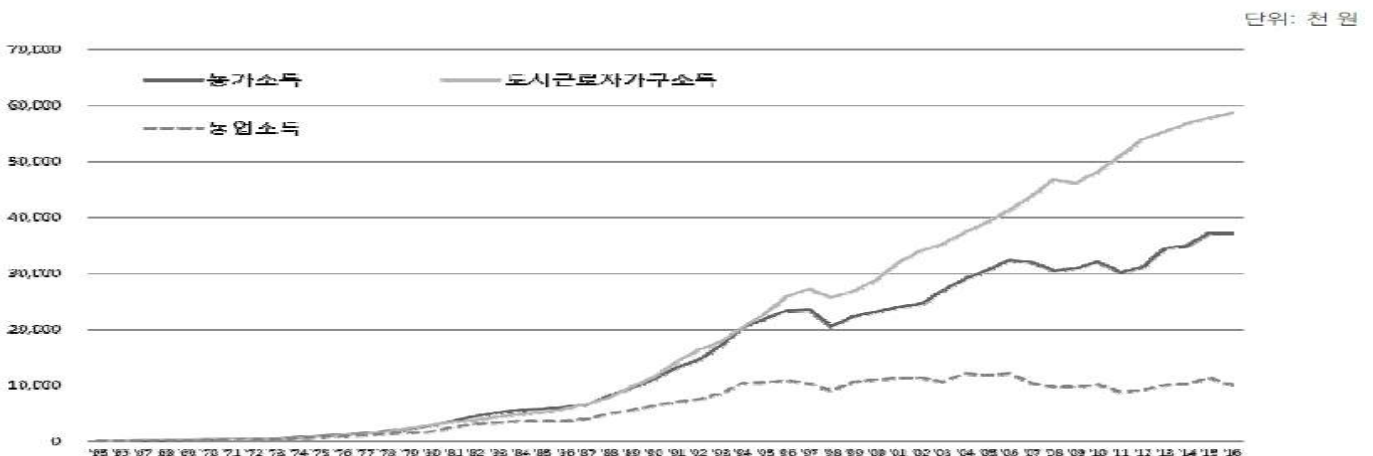
■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우병준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1.30.)

<요약>

1) 최근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농업소득은 그러지 못했음. 농업총수입은 2008년 이후 연평균 2.4%씩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가 연평균 3.4% 상승하여 농업소득 증가폭은 연평균 0.5%에 불과하였음.

2)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1990년대 초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확대되었음.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가소득의 상승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4>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소득 추이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www.kosis.kr).

3) 2016년도 연령별 농가 수 추이...30세 이상~74세 미만의 경우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75세 이상의 고령 농가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청장년 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됨. 2016년도의 경지 규모별 농가수의 경우 2008년 대비 0.3ha 이상~7ha 미만의 농가수는 감소 하였으나, 0.2ha 미만과 7ha 이상 농가가 증가하면서 영세농과 대농이 증가함.

4) 지니계수로 측정한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불평등도 심화가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변이계수로 살펴본 농가소득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다만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원문 읽기> <https://goo.gl/jRkm3K>

시사점

1)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커진 현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된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임.

■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제시해야 (경실련, 2017.11.30.)

<요약>

1) 정부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와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연간 8.5만호) 등 총 14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중심의 대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그간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2) 정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며, 이중 연 8.5만호를 민간분양용으로 건설사들에게 매각한다. 5년간 40만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건축비 부풀리기로 인해 같은 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 배 이상 고분양 됐다

3) 정부가 65만호로 밝힌 임대주택 물량 중 전세임대와 같은 임차형이 17만호, 매입임대가 13만호로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임대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방식으로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금대출 성격의 지원책으로 결코 공공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매입임대도 지금까지처럼 비싼 땅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입비용 현실화 등 한계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건설형 임대주택 35만호에서도 7만호는 여전히 건설사특혜 분양전환임대로 공급한다. 결국 65만호 중 실질적인 장기임대 주택은 28만호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마다 수십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이러한 단기임대가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이 적다보니 집값과 전월세가격 급등에서 서민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는 단기 분양전환임대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임대로 전량 공급해야 한다.

4)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이며,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따라서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은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들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확대, 택지개발로는 공기업과 건설사 등 개발업자만 이득을 볼 뿐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원문 읽기> <https://goo.gl/gu44eG>

시사점

1) 과거정부에서 실패한 주거정책 실패 모델을 답습하기 보다는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이행 및 원가공개 확대, 공공택지 내 주택지 매각중단, 공공임대 분양전환 중단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참조.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 지시사항 (청와대, 2017.12.3.)

<요약>

- 1)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전화보고와 한차례의 서면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후 0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도착하여 해경·행안부·세종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상세보고를 받고 09시 31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 2) ①현장의 모든 전력은 해경 현장지휘관을 중심으로 실종 인원에 대한 구조 작전에 만전을 기할 것. ②현재 의식불명의 인원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의료조치가 취해지길 당부함.

<원문 읽기> <https://goo.gl/lgbyxk>

■ 시사점

- 1) 사고발생 시간은 06:05, 신고접수가 06:09, 구조보트 현장 도착 06:42, 수중전문구조대 도착 07:17과 07:36 도착하는 등 1시간12분이 경과한 다음에 사고 선체 진입이 가능한 구조인력이 도착한 상황이므로 인명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임.
- 2) 핵심은 골든타임에 수중전문구조대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해상 구난대책을 세우고 가동하는 것임. 문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사실상 사후적 뒷북 지시임.

■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NSC 전체회의 결과 등 (청와대-외교부, 2017.11.29.)

<요약>

- 1)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정부는 북한이...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2) 11/29(수) NSC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3) NSC 전체회의 결과 국민소통수석 서면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은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
- 4) 한·미 정상통화 결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선, “양 정상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adRm5G>

[시사점]

1)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상황인식을 보여줌.

■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틸러슨 장관의 성명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전문 (주한미국대사관, 2017.11.28./ 2017.11.30)

<요약>

- 1)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판단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여(launch of what is likely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to the Sea of Japan) 주변국과 동북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한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2)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북한의 행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국제사회는 기존의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추가하여 북한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해상 보안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미국은 캐나다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이 참가하는 유엔사령부 파견국 회의를 소집하여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외교적 옵션이 열려 있으며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Diplomatic options remain viable and open, for now.)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평화적인 비핵화의 길을 모색하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 4)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8일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두 번째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두 정상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Both leaders reaffirm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compelling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at any cost.)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문 읽기> <https://goo.gl/vyoajb>

[시사점]

- 1) 첫째, 화성15형을 ICBM으로 평가한 점. 둘째,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점. 셋째, 유엔사령부 파견국회의 소집을 준비하는 점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됨.
- 2) “어떠한 대가(any cost)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부분은,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과 연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증폭되어 가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 (조선중앙통신, 2017.11.29.)

<요약>

1)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2)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대륙간탄도로켓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ojULxm>

[시사점]

1) 김정은은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고, 화성15형에 대해 미 국방성은 ICBM으로 평가함. 전문가들 다수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함. 그러나 여전히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여부는 평가중.

2) 또한 문제는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라는 표현으로, ‘령토완정’의 북한식 의미는 “국토의 통일” 즉, 완전히 정복하여 다스림의 의미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교육부, 2017.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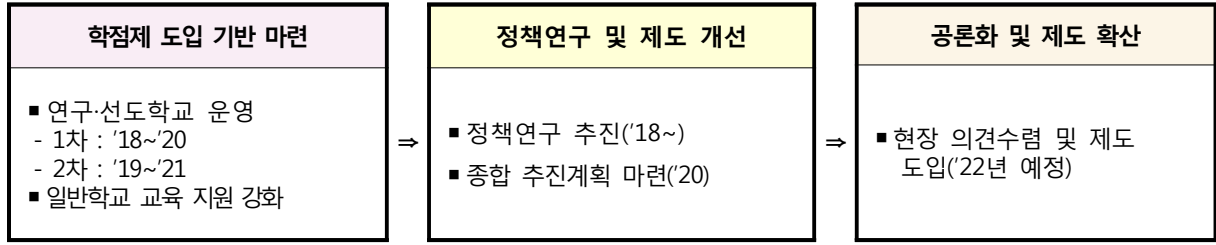
<요약>

1) 교육부는...’22년 도입을 목표로...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2)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고교학점제는...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3)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도입 준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 단계별 추진 일정(안) 〉



〈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교교육 혁신에 따른 변화 〉

구분	이전	변화										
학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율적 관리의 대상 ▶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동적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존재로서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 ▶ 자율(과목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 										
교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지식 전달자, 학생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시 ▶ 대학입시 및 진학 지도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 ▶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대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단위) 학년 및 학급 ※ 문·이과, 진로집중과정에 근거한 학급 편성 및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 (편성 준거)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교원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 위주 편성(공급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단위) 과목을 선택한 학생그룹 ※ 적성, 흥미 등에 따른 개인별 과목 선택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 (편성 준거)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중심(수요자 중심) 										
교육의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유형 다양화(외고·자사고)를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 학교 간 서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 타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제시 ▶ 평준화 체제 하의 수평적 다양화 										
<p>< (예시) 고교 체제 개편 전·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비교 ></p> <table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외고</td> <td style="padding: 5px;">심화 영어 회화·작문</td> <td rowspan="3" style="font-size: 2em;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일반고</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제고</td> <td style="padding: 5px;">국제 관계와 국제기구</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화 영어 회화·작문(외고)</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자사고</td> <td style="padding: 5px;">사회문제 탐구</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국제 관계와 국제기구(국제고) 사회문제 탐구(자사고)</td> </tr> </table>			외고	심화 영어 회화·작문	➔	일반고	국제고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심화 영어 회화·작문(외고)	자사고	사회문제 탐구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국제고) 사회문제 탐구(자사고)
외고	심화 영어 회화·작문	➔	일반고									
국제고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심화 영어 회화·작문(외고)									
자사고	사회문제 탐구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국제고) 사회문제 탐구(자사고)									
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 ▶ 국·영·수 내신 및 수능 중심 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 강화 ▶ 선택 교과·자발적 학습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초·중고 교육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열화된 고교 체제 하, 고입·대입 경쟁을 위한 초·중학교 교육의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교육 혁신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원문 읽기> <https://goo.gl/R4bt8W>

시사점

- 1) 학제개편 등 교육체계 전반의 재설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구학교' 지정 운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큼. 또한 학생수가 적은 농촌학교 대책도 사실상 부재함.
- 2) 과도기 동안의 학점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방안 부재 문제도 있음. 또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자율적 전환이 아닐 경우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큼.

※ [참고자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료 (2017.12.4.)

▶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100일이었다. 부족한 제게 관심 애정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단 15분 정도 4가지만 말씀드리려 한다.

▶ 지금 국민들 가장 걱정하는 안보문제 그 다음에 원내에서 예산 문제 그리고 지난 100일 또는 지난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저 나름대로 느꼈던 소회,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비전 더 구체적으로는 4대 정치 개혁과제에 대해 말씀.

▶ **안보문제부터.** 국가안보 심각한 상황. 근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 선언. 근데 정부 혼선 계속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 봉쇄 훈련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런 혼선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북정책 중에 유일하게 일관성 지키는 게 혼선 계속되는 것이라든 말 나오겠나. 그리고 또 북한 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APEC 다녀오고 한중회담을 앞두고도 야당과 국민에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 실질적인 안보상황이 어떤지 무력충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미국의 요구와 우리 정부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중국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선 설명해주셔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북한이 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실제 핵 무력 완성에 이를 경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우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우리 대응태세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상황 어떻게 막을 것이고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혜 모아야. 전 여러 번 걸쳐 말했지만 안보엔 여야 없다 생각하고 항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대통령의 성의 있는 설명 요구한다.

▶ **그리고 짧게 예산안 말씀.** 예산안 우리 국민의당은 합리적 대안 갖고 문제해결 위한 중재노력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 밀어붙이기 전에 공무원 증원 관련해 지난 추경예산 때 국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 즉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 달라 하는지 설명 있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 보전 문제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 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 활용 등 대안이 옳다는 점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은 국민 혈세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지 정권 위해 쓰여질 순 없잖나. 정부여당에 각성 촉구하고 원칙과 합리적 개혁기준 입각해 제대로 임해줄 것 촉구한다. 이정도가 현안에 대한 두 가지 말씀 드렸다.

▶ **소회.** 5월 대선 패하며 많은 부분 느끼고~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했다. 그것이 제가 8월 전대 출마한 이유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지만 국민의당이 작년 총선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받은 후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외연 확대와 혁신의 길을 가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서 홍보 리베이트라고 누명 씌운 것도 있다만 결국은 저희가 부족한 탓이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 적지 않은 변화 가져왔던 점은 여기 계신 언론인들 알고 계실 거다.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보터가 등장해서 기득권 양당 밀실담합 장외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당리당락에만 치중했던 정치세력이 국민 눈치 살피게 됐다. 국민의당이 여야의 당리당락 잣대로 어떨 땐 민주당 2중대 어떨 땐 자유한국당 2중대 이렇게 모함을 받지만 원칙과 합리성 기반해서 저희 나름대로 적은 숫자의 현역 의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국회선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이 유효하고 강력했지만 선거국면에서 중심으로 서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대선 패배 통해서 기득권 양당과 버금

가는 정치적 구도와 지형 만들지 않고선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노력해도 기득권 양당 철옹성 깨는 단 한계 있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득권 양당 철옹성 깨지 못한다는 건 곧 국민의당 생존과 직결돼 있다. 지난 대선 패배가 기득권 양당 구도 혁파 위한 더 큰 제3의 지형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줬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명분을 확대 강화하는 튼튼한 제3지대 지형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다당체제 구축하는 거다. 이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층 넓혀가고 그 힘을 현재 정치구도 재구성해서 양당제 회귀 흐름을 차단해야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저 나름대로의 반성 성찰들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이 4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서야만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다.

▶ **4대 정치개혁 과제**는 첫 번째 양대 정당 적대적 공존 극복하고 다당제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 정치서 대화와 타협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다. 아직 많은 언론서 주목하고 계시진 않지만 20대 국회 특징 중 하나가 국회 공전 사라졌다. 근데 다당제 났단 사실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적이 두 번 있었다. 처음 나갔을 때 아마 예전 국회처럼 우리가 나가면 국회가 기능 정지하고 공전하겠지 그러면 빌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교섭단체 두 당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다시 복귀했다. 또 나갔지만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다당제의 힘 아니겠나. 물론 정부여당에만 유리한 게 아니다. 이 세 교섭단체 중 두 당이 반대하는데 소수정당 여소야대 정국서 정부여당이 고집만 피울 수도 없는 게 또 다당제 힘이다. 지금 또 예산정국선 그 힘 발휘되고 있다. 이런 다당제 만들고 지키고 무엇보다 다당제가 국민 위해 봉사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과제다.

▶ 두 번째 한국정치 고질병으로 지목돼온 지역구도 극복 지역감정 치유다. 얼마 전 김관진 전 장관 석방되니까 송영길이 이렇게 말했다. '판사가 TK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으로 정치해온 정치인들이 판사 판결에도 지역감정 프레임 들이댄다. 어처구니없지만 지난 30년간 그들은 그렇게 정치해왔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인공지능의 덩 러닝 시대에 지역감정 말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낡았는가를 정말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박제화 된 정치이념서 벗어나야. 한국의 보수는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같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 침해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상처 내는 중대한 과오 범했다. 한국의 진보는 운동권과 결합해 민주화에 기여했다만 시대착오적 반미 민족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 둘 모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유와 창의성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에서 끌고가는 방식 아닌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정치 세력교체와 인물교체를 이뤄내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권정당 돼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닐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모순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서구에서 30대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한다.

▶ 저는 제도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고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는다.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에 갇힌 기득권 세력 명분 없는 정치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역량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계실 거다. 제가 때론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다. 짧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비단 깔아줘도 가지 않겠다 단 각오로 그렇게 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열심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걸겠다. <끝>